



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소속

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

산자부 가스산업과 등 에너지산업심의관 산하 각과의
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알아본다.

가스산업과

1. 일반현황

가. 가스산업 현황

◇LNG(Liquefied Natural Gas, 액화천연가스)

- 86년에 최초로 발전용으로 공급(도시가스는 87년에 공급)
- 전량 수입에 의존,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가 독점 공급
 - 도매부문은 가스공사가 발전소·도시가스사에 독점 공급
 - 소매부문은 20개 도시가스사가 지역별로 수요자에 독점 공급
- 도매가격은 산자부장관, 소매가격은 시·도지사가 승인

- LNG보급을 위해 90년초부터 천연가스 전국 공급사업 추진중
- LNG사용가구는 99년말 현재 686만가구(보급율 58.4%)
- ◇LPG(Liquefied Petroleum Gas, 액화석유가스)
- 59년에 최초로 LPG 공급(도시가스는 72년에 공급)
- 국내생산(정유 4사) 및 수입(수입 2사)을 통하여 공급
 - 독점공급이 없어 비교적 시장경쟁기능 활성화
 -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사우디 등 중동지역 생산물량
- 정부가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
- 주거·상업용 및 자동차 연료로 주로 사용
 - 99년말 현재 900만가구 및 70만대가 사용
- LNG 및 LPG도입가격은 유가상승의 영향

으로 99년이후 상승세

나. 가스수급 현황 및 전망

◇수급동향

○가스는 소비의 편리성, 청정성 등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

-LNG는 배관망 확충에 힘입어 87~99년간 평균 18.7% 증가

-LPG는 LNG 보급확대의 영향으로 90년대 들어 증가세 둔화

※ LNG 도입단가(\$/톤) : (98년)146.8→(99년) 162.4(10.6% ↑)

※ LPG 도입단가(\$/톤) : (98년)177.2→(99년) 213.9(20.7% ↑)

◇금년도 수급전망

○경기호전,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요 증가세 지속 예상

-LNG는 도시가스가, LPG는 상업용과 차량용이 수요 주도

○금년도 가스수요는 전년대비 7.9% 증가한 20,627천톤 수준

-LNG는 남부권 신규공급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9.1% 증가

-LPG는 차량용 LPG수요 확대에 전년대비 5.5% 증가

○도입물량도 전년대비 13.2% 증가한 20,012천톤 수준

(가스 수급실적 및 전망)

(단위 : 천톤, %)

	98실적		99잠정		2000전망	
	수요	증가율	수요	증가율	수요	증가율
수요	16,182	-5.8	19,116	18.1	20,627	7.9
LNG	10,421	-6.5	12,653	21.4	13,806	9.1
LPG	5,761	-4.5	6,463	12.2	6,821	5.5
도입	14,679	-10.3	17,682	20.5	20,012	13.2
LNG	10,600	-8.8	12,973	22.4	15,004	15.7
LPG	4,079	-13.9	4,709	15.4	5,008	6.3

2. 2000년 업무계획

□가스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스인프라 확충, 제도정비 등 경쟁여건 조성

◇LPG 가격자유화(2001년)를 대비한 제반준비 철저

가. 가스산업 경쟁기반 구축

◇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

○가스공사 민영화 일환으로 현행 도소매 독점체제로 운영되어온 가스산업을 2002년까지 경쟁체제로 전환기로 결정(98. 7월)

-가스공급인프라 완비(2002년) 등 경쟁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

○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충·발표(99. 11월)

-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

• 도매부문은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도입계약을 2001년 3개사로 분할하여 2002년까지 매각

• 소매부문의 경쟁은 도매부문의 경쟁도입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실시

○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경쟁기반 조성

-우리부내 「가스산업 구조개혁단」 신설 : 2000년 상반기

-경쟁촉진특별법(가칭) 제정 등 관련법령 정비 : 2000년 하반기

◇가스공사 추가 증자 실시

○가스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민영화 이전에 총 2,500억원 증자기로 결정(98. 7월)

○지난해말 우선 1,200억원을 공모증자하고 증권거래소 상장

-민영화 의지를 대외에 명확히 하기 위해 정 부지분 300억원을 함께 매각

○나머지 1,300억원은 증시여건을 고려하여 연 내 추진

나. LPG가격 및 유통체계 개선

◇자동차 LPG 사용규제 개선

○저세율 에너지인 LPG 차량의 급격한 증가 로 세부담 불균형, 에너지수급 애로, 세수감 소 및 충전소 부족 등 문제점 대두

○동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(99. 10. 23) 후속조치로 석유가격 구조개편을 위 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진행중

※에경연, 조세연, 환경연, 교통연 공동연구

※사업기간 : 99. 12~2000.5

※기본방향 : 석유소비절약 유도 및 유종간 상대가격 구조의 왜곡 시정

○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 쳐 금년 하반기중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절차 진행

-석유가격 개편추이를 보아가며 자동차에 대 한 LPG 사용규제 폐지(가급적 금년말까지)

◇LPG 가격 자유화방안 수립 · 시행

○LPG 가격은 자유화 전단계로 99. 1월부터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, 2001. 1월부터 완전자유화 계획

※LPG가격 : 수입가격(CIF, 관세 등)+국내공급비용

○가격 자유화로 인한 소비자의 적응력을 제고 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 방지

-2000년 하반기부터 가격변경주기를 현행 3 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 운영

-국내 공급비용 원가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격 자유화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 당이득 요인 제거

-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감시기능 강화(월1회

→월2회)

◇LPG유통구조 개선

○LPG 가격자유화등에 대비하여, 판매업소간 무분별한 경쟁에 의한 안전위험 방지등을 위 해 현행 유통구조상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 안 모색필요

○이를위해 관련업계 중심으로 개편작업단을 구 성하여 검토중이며, 연구용역도 병행실시중

○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 법령개정등 필요절차 추진

석유산업과

•그간 공급자 위주로 운용해 온 석유정책을 소비자위주로 전환하여 석유산업의 시장실 패요인 개선

•에너지원별 상대가격구조의 불균형을 시정 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

•정부비축사업의 추진기틀을 정비하고 산유 국 외교를 추진하여 석유의 안정수급기반을 강화

1. 국내 석유산업의 시장실패요인 개선

○국내유가의 합리적 책정 유도

-합리적 유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정유업계 의 가격책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 도감독 강화

-정유업계와 석유수입업체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 유도

· 석유수입업체수 : (98)4개→(99)14개

○정유사 및 대리점의 덤핑행위 근절 추진

-덤핑여부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강화로 덤핑 조기경보체제 구축

-덤핑혐의 확인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조 사 요청

-넉평공급 방지를 위한 전산망 운영 및 공급자 규제방안 강구

○과잉생산구조의 개선 추진

-추가적 정제설비 투자 자제 및 고도화설비 투자 유도

-국내수급현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감산방안 추진

○석유품질관리 강화

-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기구·인력 보강으로 검사기능 강화

2. 에너지원별 가격구조의 왜곡현상 개선

○현재 수행중인 예정연 연구용역결과(5월 완료)를 토대로 가격구조개편 종합방안 마련

-금년 내에 세법 및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하여 반영

○이와는 별도로 석유화학 부산물(C9)과 석유제품간의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석유화학 부산물을 석유제품에 추가하고 유통관리방안 마련

3. 정부 석유비축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강구

○2006년까지 내수 소비량의 60일분 비축을 목표로 제2·3차 비축계획을 추진중이나, 예산 부족으로 목표달성에 애로

○99년말 현재 정부비축시설은 96백만 B, 비축유는 56백만 B로 비축유 투입율은 58.3%에 불과

○그간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제3차 석유비축계획(95~2006)을 수정·보완

○정부 비축예산의 획기적 증대방안 강구

-비축유의 SWAP 판매방식을 활용한 비축유 증대 병행

○잉여 비축시설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공동비축사업 확대 추진

-사우디 Aramco사, 미국 Cargill사 등과 신규계약 체결추진 (6백만배럴)

4.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 추진

○그간의 추진실적

-자회사인 한국송유관공사 흡수통합(98. 7) 및 지엔지텔레콤 매각(99. 11)

-송유관공사의 주식가치 평가(99. 11~12)

· 현금흐름가치 12,556원, 순자산가치 9,009원(액면가 1만원)

○향후 추진방향

-금년 6월말까지 민영화(정부지분 매각) 완료

-특정 주주사의 경영권 지배가능성에 대비하여 송유관 운영에 관한 공익규제제도 도입 추진(하반기)

-고용안정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

5. Al-Naimi사우디 석유장관 방한 준비

· 사우디 석유장관(Al-Naimi)은 99. 12.27일자 서한에서, 2000년 2월 하반기에 방한할 의사를 표명

○Al-Naimi 장관 방한시, 한·사우디 에너지 장관회담 및 석유·광물자원 협력위원회를 개최토록 추진

○우리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제를 발굴하여 성사 추진

-국제유가 안정화방안, 원유 및 LPG 교역구조 개선, 공동비축사업 추진, 사우디 광물자원 공동조사, 플랜트 수출 등

※UAE 및 쿠웨이트와도 금년중 석유협력위원회 개최 추진(서울)

전력산업과

·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

하고

-전환기의 전력수급 안정 확보에 주력하며
-남북전력협력방안을 강구하여 남북경제공
동체 실현 노력

1.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행기의 전력수급 안정 도모

- ◇구조개편 이후 장기전력수급계획 운영방안
강구
- 우선, 민간의 발전소 건설참여 확대를 추진
- 시장실패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정 설비규모
와 원별 구성비 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
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·운영
-공급 과잉시의 건설시기 조정(사업허가, 행
정지도)과 공급부족시의 건설유인책(요금,
자금지원) 등 구체적 대책 마련
- ◇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 능력 확보
- 금년 최대전력은 전년대비 7.4% 증가한
4,005만kW로 전망되나, 설비확충과 수요관
리 확대로 공급 예비율은 16% 수준 유지 가능
- 여름철 수요급증에 대비하여 하계 수급안정
대책 수립·시행

2.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 전력협 력방안

- 북한은 설비 노후화와 발전용 연료부족으로
심각한 전력부족난에 당면(연간 49억kWh 이
상 부족)
※발전설비 용량(98년말) : 남한 43,406천kW, 북한
6,928천kW
-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현실화시 북한의
전력공급 지원요청에 대비하여 「남북한 및
동북아국가간 전력협력방안」수립
- KEDO본공사 착공식(2000상반기 예정)에
아측 고위공무원 참석 추진, KEDO-북한간
미합의 의정서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원

3. 전력설비 건설·운영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 방안

- 최근 송전선로 건설반대 등 집단민원이 급증
하고 있어 건설사업이 계획된 준공시기보다
1~2년정도 지연되는 실정
※95~99년간 민원 1,222건중 집단민원이 418건(위치
변경 237건, 피해보상 151건)
-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부터
건설단계까지 지자체,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
된 「협의체」를 구성·운영
-모든 전력설비 건설시 「환경영향평가제도」
를 도입
- 건설이후 운영단계에도 전력설비 안전성에
대한 홍보를 강화하고, 민관합동 환경관리·
감시체제 도입
-전자파 피해여부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
토 및 기술기준 정립

원자력산업과

- 원전의 안전운영을 바탕으로 국민 수용도를
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원전의 지속적 추진기
반을 강화하고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
을 중점 시행

1. 원전사업의 경쟁력 강화

가. 원전산업 추진체제 개편

-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원전산업 추
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
방안 마련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
시행(99. 2~99. 12)
- 금년 상반기중 용역결과 제시된 개편방향을
근간으로 원전산업 추진체제 개편방안 수립

나. 차세대원전 개발로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

- 92년부터 추진중인 140만kW급 「차세대원

전]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제고

- 내년중 발주(2010년 1호기 준공)을 목표로 기본설계 완성 및 안전규제기관의 설계인증 추진

※내년이후 차세대원전이 발주될 경우 용량 격차(140만kW 대 90만 kW)로 인해 CANDU형 원전의 경제성 비교우위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

2. 원전건설의 차질없는 추진

가. 신규원전 노형 결정

-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금년중 건설에 착수해야 할 2개부지(봉길 및 효암·비학부지)의 신규원전 노형결정 필요
- 봉길부지 노형은 당초 중수로(CAND-9)와 한국표준형경수로를 비교 검토하여 99년말까지 노형을 결정하기로 했으나,
-중수로 안전문제에 관련한 주민여론 동향 및 표준형원전의 경제성 향상 등 최근의 여건 변화로 노형결정 연기
- 상업적 요소를 주평가 사항으로 경합국(미국, 캐나다)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신규원전 노형 결정

나. 신규원전부지 적기 확보

- 2030년까지 원전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 2개소는 유치를 희망한 울진군 및 울주군을 대상으로 확보 추진
-울진군 부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금년중 예정구역 지정 추진
-울주군 부지는 지역정서를 감안, 우선 홍보 등을 통해 원전수용도를 제고하고, 여건이 성숙되면 예정구역 지정 추진

다. 방사선편기물 관리부지 선정절차 착수

-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적기 확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세부 부지확보 추진계획을

수립하고 부지선정절차 착수

- 공개적이고 투명한 유치공모방식으로 추진
- 환경·주민친화적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수용도 제고

3.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 제고

가. 원전운영체제를 안전성 위주로 전환

- 원전 운영체제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성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·시행
-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 2차계통 안전성 검사기준 제정
-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 확대(2개 지역→4개 지역)

나.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강화

- 원전 신규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강화
-원전 자율유치지역 및 다수호기 건설지역에 대한 사업의 조기·우선시행 근거 마련
-지역별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 극대화
- 이를 위해 상반기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추진

다. 원전사업에 대한 대국민 밀착홍보 강화

-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원자력 홍보 전문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의 기능 및 체제를 대폭 개편
-외부 홍보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Out-sourcing 확대
-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밀착홍보 시행(부락 단위 홍보 등)
- 한전, 원자력문화재단, 한전기술(주) 등 관련 기관간 홍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홍보 및 평가 실시

석탄산업과

- 탄광 자율판단에 따른 폐광·감산 적극 지원
- 탄광지역 소요 후속조치와 사전예방
- Casino Resort 적기준공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전기 마련

1. 광산노조와의 합의사항 이행

- ◇ 발전용무연탄 수요를 법령으로 보장
- 「전기사업법개정(안)」에 발전용 무연탄수요 보장근거 기반영
- 향후 시행령 개정시 “무연탄수급계획상의 발전용 무연탄 공급량을 발전사업자가 구매하도록 조치”하는 내용 반영
- ◇ 폐광대책비 현실화
- 89년이후 폐광은 탄광이 자율 결정하되, 폐광시 근로자와 광업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원
- 광산노조는 대폭 인상(16.4→36개월분) 희망, 현재 「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」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검토 중
 - 타업종에 미치는 영향 차단방안 포함
- 2월말까지 실무작업, 4~6월 석탄산업법령 개정 거쳐 시행
- 감산·폐광 가속화에 대비, 폐광대책비 예산 확보 동시추진

2. 태백시 소요 후속조치 및 사전예방

- ◇ 기획예산처와 합의, 합의사항 차질없이 이행 추진
- 탄광 폐광시 탄가보조금 상당액(1,000억원/년) 태백시에 지원
-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(연수원 유치 등)
- ◇ 다른 탄광지에도 동등대우 보장 추진, 소요 사전 예방
- 관계부처와 합의, 태백시와 동일수준의 예상

지원방안 추진

3.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위한 대북 석탄지원 추진

- ◇ 북한의 에너지부족과 남한의 석탄재고 과다 동시해결
- ◇ 예상 문제점 및 과제
- 군수물자로의 전환 가능성
- 북한이 하역시설·트럭 등 운송수단 제공 요구 가능성
- 무상지원시 재정 부담, 유상지원시 탄대회수 곤란 예상
 - 북한 입주 국내기업의 인건비와 대환, 물물교환 방안 검토

4. Casino Resort조기 준공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전기 마련

- ◇ Small Casino 금년 8월 준공, 10월 개장
- 사회적 부작용 대책, 6월까지 마련
 - 경찰 인력·조직 확충 및 경비용역업체 조기선정
 - 「내국인출입 카지노 운영준칙」조기제정(문관부, 행자부 협조)
- 숙박시설, 접근도로 등 기반시설확충 우선배려 추진
 - 38번국도 조기 확충(서울~고한까지, 건교부와 협의)
 - 기존열차 확충 및 관광전용열차 운영(철도청과 협의)
- ◇ Small Casino 운영경험을 토대로 본 Casino, 2002년 개장 추진
- 금년 3월 관광연구원 용역결과를 보아 조기 시행계획 확정
- 본 Casino 개장시 스키장·골프장·테마파크 등 동시개장 추진, 종합리조트 조기 완성
 - 골프장, 스키장은 내·외자유치 추진(강원랜드는 지분참여)